

나. 권리사용료 가산방식의 적법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거래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의 산출방식과 관련하여,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야 하는 대가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거래조건성 요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는 본문에서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당해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호는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은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